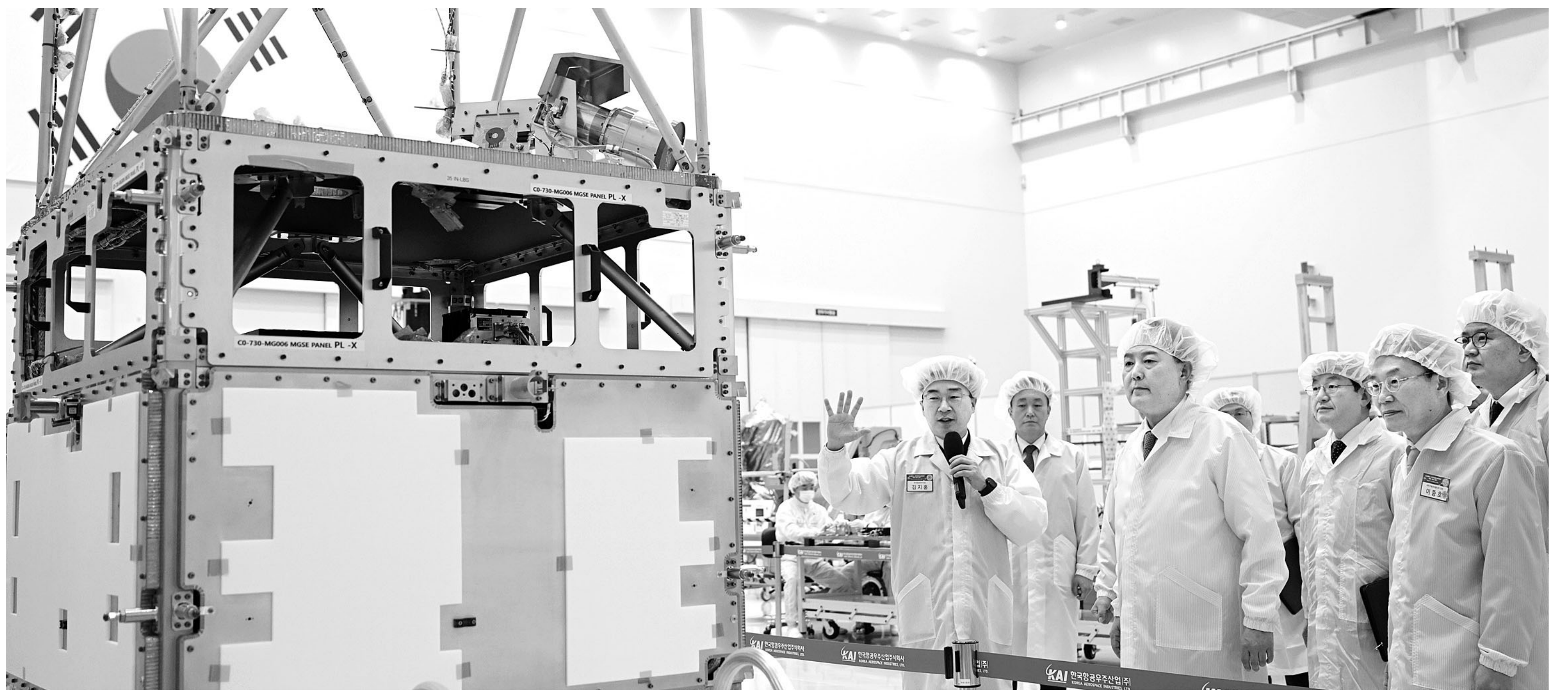
尹 "우주개발 예산 1.5조 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차세대중형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2045년까지 100조 투자 끌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1000개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사천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하는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예정지다.

그러면서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천명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라며 "저와 정부는 그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연내 완료하는 한편,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도 2028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도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TV 중계로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을 밟던 감동적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부터 제게 우주는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머지 않은 미래에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인 우주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 등 정부 출범 후 기울여온 노력들을 돌아본 뒤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학생, 경남 지역주민,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 축사 후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을 밝혔고, 연이어 대전·경남·전남 지자체장들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발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도태우 공천 유지' 표심 영향 촉각

"5·18에 북한군 개입" 망언…광주시·오월단체 비판 성명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의 과거 발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번 사안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 당사자들의 사과 이후 기존의 공천 결정을 유지했지만, 당내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2019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 "도태우 후보 발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도 후보의 두번째 (사과) 입장문을 통해 5.18 정신에 대한 도 후보의 입장이 명확해졌고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졌다고 판단됐고, 국민께서도 그 부분까지도 지켜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전날 사과문에서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재검토 요청으로 공천 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두 차례 대국민 사과로 몸을 바짝 낮추면서 구제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유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공격하겠지만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이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후보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며 "방어 논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당 공관위는 또 '난교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부산 수영 공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적은 게 문제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싫다', '식용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이라는 과거 게시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이나 당직을 맡지 않은 일반인 시절 한 발언을 이유로 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할 경우 야권의 공세 강화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 후보 공천권 유지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도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태우 후보는 첫 사과에서 '북한군 개입 발언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사실이 아니다'고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가 공천 재검토에 들어가자 다시 사과문을 발표해 누가 봐도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5·18 북한군 개입 의혹 주장을 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 망언 도태우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겉과 속이 다른 5·18 농락에 분노한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을 하는 등 국민의힘 방침과 명백히 정면 배치되는 부끄러운 도태우를 공천한 것은 5·18에 대한 이중적 태도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비례 8명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국민의미래 파견…기호 4번 목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누가 제명 처분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제명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인 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이 기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은 당 윤리위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명된 의원들은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의원의 경우 당적을 옮기더라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4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두 번째 칸에 자리 잡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국힘 선대위 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국민의힘의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총괄·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은 후속 인선을 완료했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및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부위원장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정양석 전 의원이 합류했다.

한지아·윤도현 비대위원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도 국민의미래로 이적을 앞두고 있어 포함되지 않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끄는 총괄본부 산하의 종합상황실장은 이만희 전 사무총장이 맡았다. 상황실 부실장으로 정희용·홍석준 의원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합류했다.

주 전 비서관의 경우 직전 대선에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을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박진·김성태), 인천(윤상현), 경기(김학용·김은혜), 충청(정진석·이상민), 강원(권성동), 호남(정운천), 부산·울산·경남(서병수·김태호), 대구·경북(주호영·임이자) 등 권역별 선대위원장 인선도 완료됐다.

선대위 산하에는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격차해소 특위 위원장은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연합뉴스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